

충남리포트 제160호

# ChungNam Report

2015. 4. 10.



## CONTENTS

### < 요약 >

1. 수도권 집중의 현상과 본질
2. 지역의 위기와 균형발전 시급성
3.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
4. 맺음말

##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

강 현 수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hskang@cdi.re.kr](mailto:hskang@cdi.re.kr)

본 글에서는 현재 수도권 집중의 현상과 본질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요 약

- 최근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음
- 그동안 역대 정부가 여러 가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복지수요 확대와 지방 재정 위기, 남북통일 가능성 등은 국가 정책으로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음.
- 시대적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정의, 자치 분권, 복지 국가 등 새로운 정책 담론이 균형발전 정책에 접목되어야 할 것임.
-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의 목표는 인구와 제조업 입지, SOC, 지역내 총생산(GRDP) 측면에서의 균형뿐만 아니라, 정부 권력과 민간 권력, 교육과 문화 향유, 복지와 일자리를 포함한 삶의 기회 전반의 균형을 지향해야 함. 또한 지역 간 편익과 비용, 보전과 개발의 균형도 지향해야 함
- 충청남도는 이미 2014년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을 중앙 정부에 제안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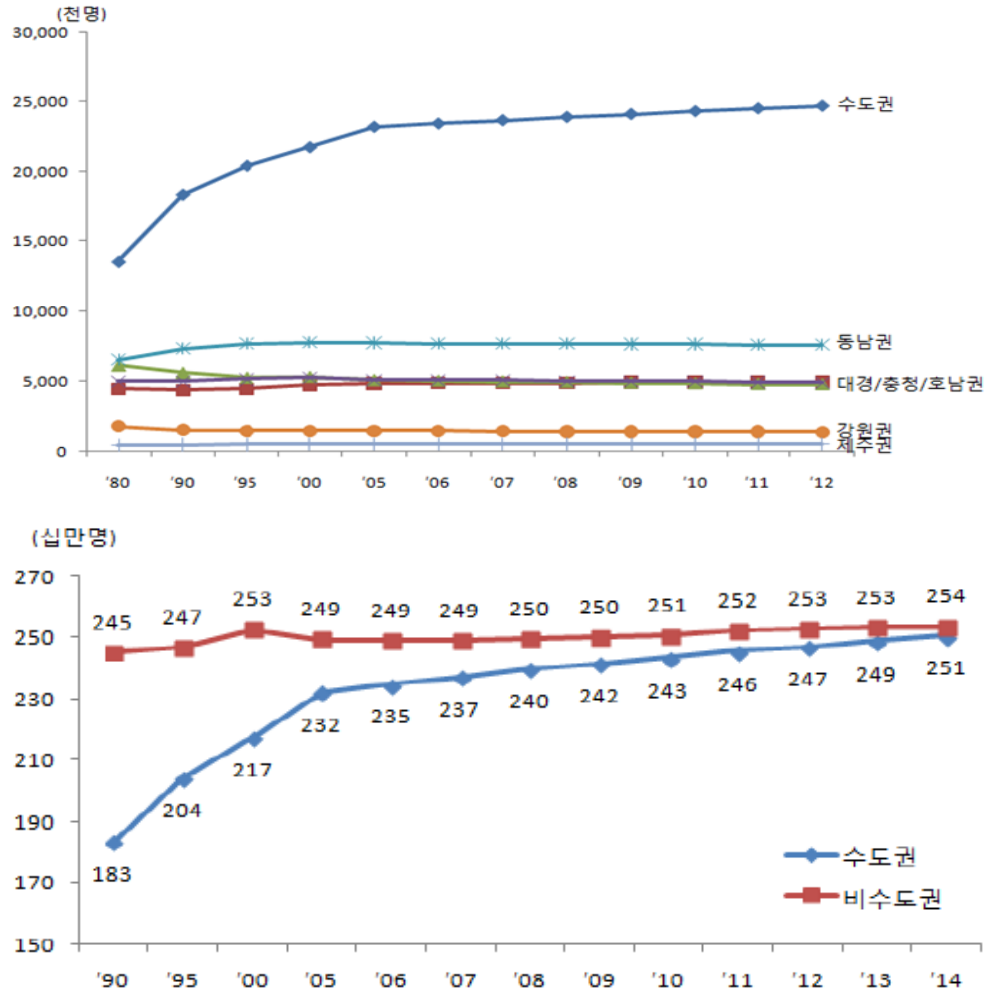
# 수도권 집중의 현상과 본질 ◀

## 01

### 1) 수도권 집중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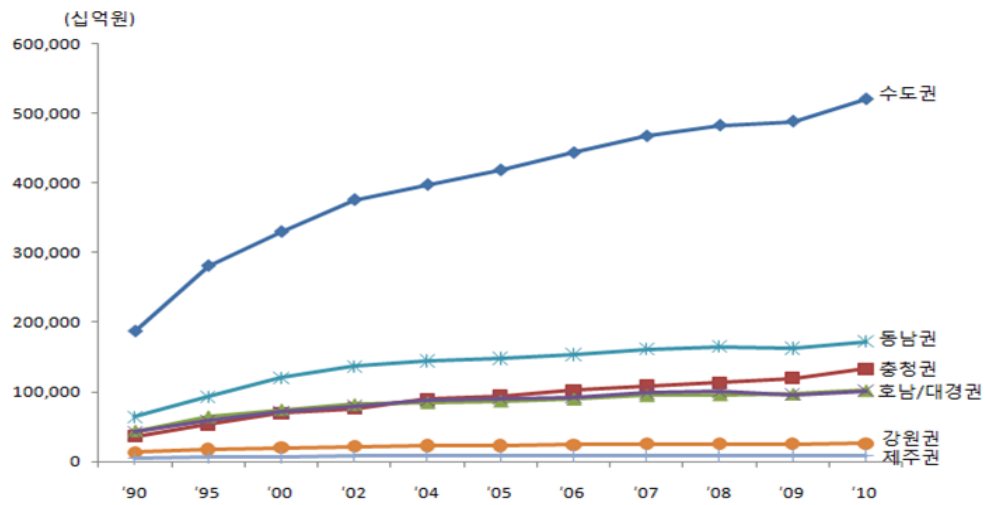
- 현재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국 인구, 생산, 고용, 부가가치의 절반 정도가 집중되어 있음.
  - 이런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보기 힘든 수도권 일극 초집중 현상임
  -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 수도권 집중도가 그동안 계속 높아지다가, 최근 들어 전국의 절반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이제 수도권에 더 이상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일어나지 않고,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지방에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 규제가 필요없다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함
- 하지만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과 직종의 수도권 집중, 이로 인한 고임금·고급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훨씬 더 심각하며, 그 집중 정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500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 대기업 중에서도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기능을 하고 있는 본사와 연구개발 기능의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음
  - 지역의 미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연구개발 역량이나 혁신 역량 역시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음.
  - 생산에 비해 소득과 소비의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높음. 기업의 영업 잉여와 개인의 재산 소득의 경우 수도권 전체가 아닌 서울에 특히 집중되어 있음 (정준호 2013 참조)

〈그림 1〉 인구의 수도권 집중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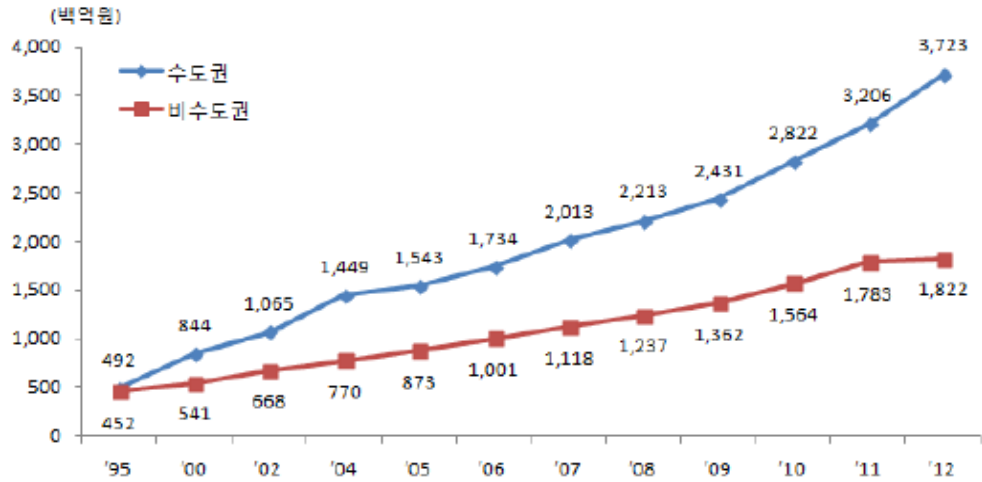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2012, 2014

〈그림 2〉 지역내총생산(GRDP)의 수도권 집중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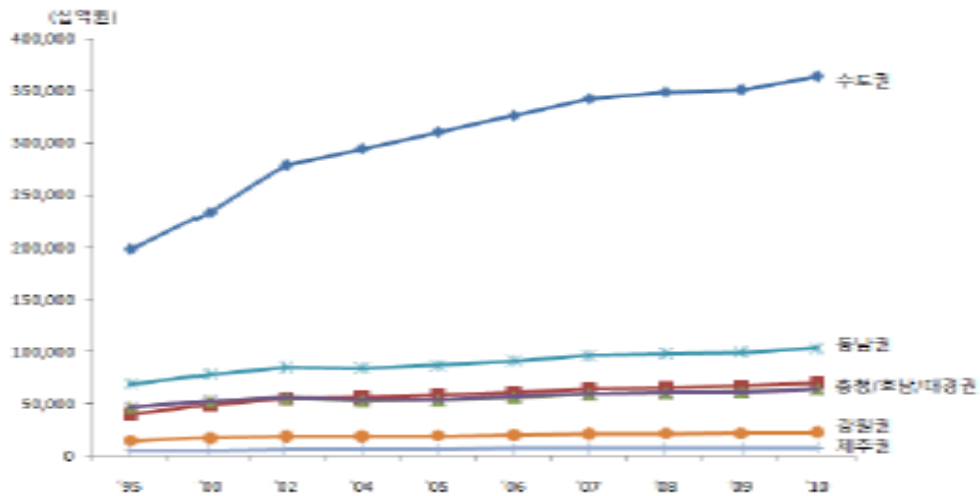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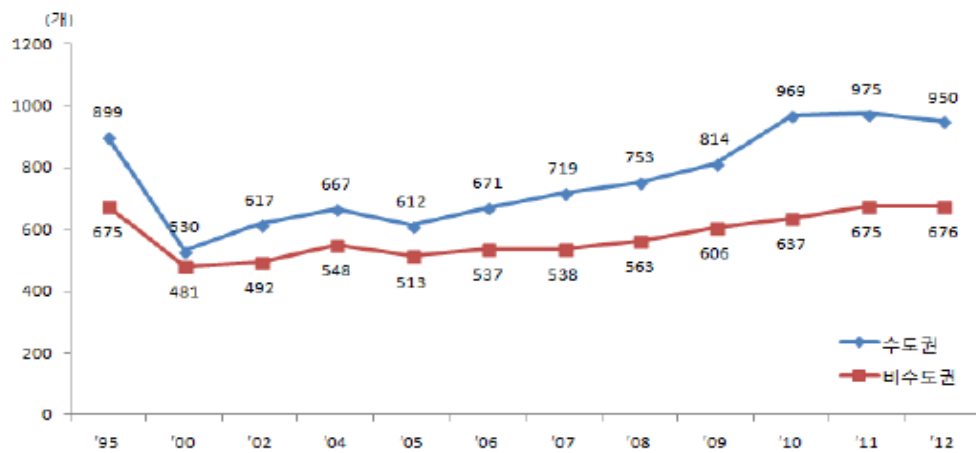
〈그림 3〉 연구개발 투자비의 수도권 집중



〈그림 4〉 소비 지출의 수도권 집중



〈그림 5〉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수도권 집중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2014

● 민간기업 권력의 서울 집중

- 1000대 기업 본사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의 매출액이 1000대 기업 전체 매출액의 80 % 이상을, 서울 본사 기업이 약 65%를 차지함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 정보 참조)
- 비수도권에 본사를 둔 나머지 대기업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 지방 본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 본사 기능은 서울 소재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서울 본사에서 관리 통제 기능을, 지방 공장에서 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과 지방의 수직적 지배 종속 구조가 고착화됨.
- 따라서 전문직, 관리직 등 좋은 일자리의 취업 기회도 수도권에 집중됨

● 양적 지표보다 더 문제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는 질적 수준의 격차임

-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교육, 문화, 여가, 의료, 미디어 분야에서 서울 및 수도권과 나머지 지방의 질적 격차가 심각하며, 국민들은 이를 일상적으로 체감.

● 사람들에게 미래의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요소인 교육 기회 및 교육의 질 역시 수도권에 다른 지역보다 우월함

- 명문 대학의 서울 집중과 지방 국립대학 위상 저하, 서울-수도권-비수도권 대학으로 이어지는 대학의 공간적 서열화, 위계화 현상이 갈수록 고착화됨.
- 명문 대학 입학 기회 역시 사교육 시장이 발달한 서울이 지방에 비해 더 유리

● 미래 먹거리 산업인 문화 산업, 관광 산업도 서울에 집중

- 방송, 출판, 영화,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 볼거리와 쇼핑 기회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서울에는 관광 산업도 집중됨.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중국 관광객도 서울을 선호함.

● 파워 엘리트의 서울 집중, 부동산 자산 가치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도 심각함.

- 수도권에 전문직, 고임금, 고급인력이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에 우리나라 파워 엘리트의 절반 이상이 거주

- 좁은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토지 주택 가치가 상승함. 이로 인해 부동산 자산 가치 및 수익도 수도권에 집중됨

●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다른 지역의 소득

- 서울과 수도권에 본사가 집중된 기업 구조에 덧붙여, 수도권의 삶의 질과 생활 편익을 누리기 위해 고소득층과 파워 엘리트들이 수도권에 집중 거주하면서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소득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음 (박경, 2011)

● 반면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시설은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 특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낙후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

-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를 유발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시설,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 시설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입지
-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가 주로 비수도권에 입지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음. 수도권 주민이 소비하는 전기 생산과 송전을 위해 비수도권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보게 됨

●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핵심은 권력과 기회, 편익의 수도권 (서울) 집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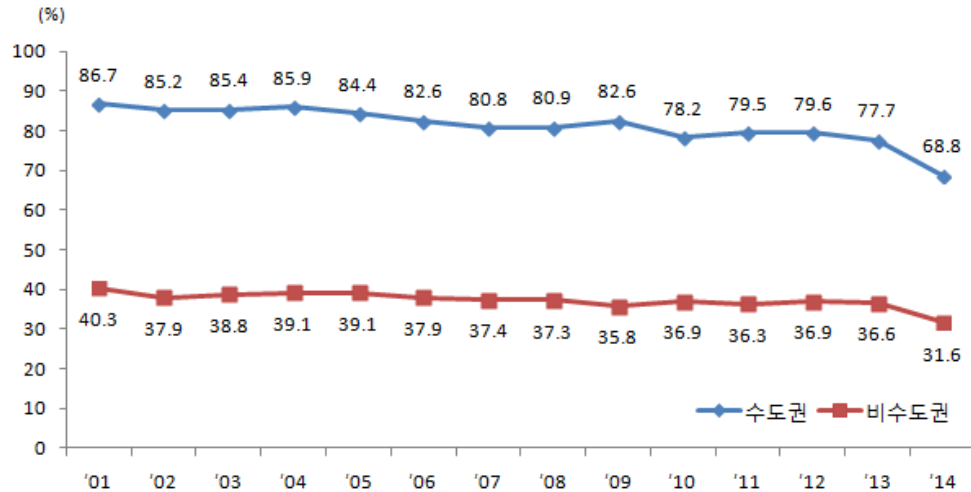
- 현재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도는 전국 대비 50% 수준이나,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산업이나 인력의 수도권 집중도는 훨씬 높고, 부동산 자산 가치, 교육 기회, 취업 기회 역시 수도권에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
- 대신 비수도권에는 단순 실행 기능, 저부가가치 산업과 직종이 주로 입지하고 있고,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교육과 일자리의 부조화(mismatch) 등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의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정의롭지 못하며 지속가능하지도 못함

## 1) 지역의 위기 징후

-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는 몇 가지 추세들이 있음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저성장과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 전 지구적 기후환경, 에너지 위기임
  - 이러한 추세들은 전국적 추세이지만, 수도권 지역보다 비수도권 지역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됨
-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존립의 위기
  - 세계 최저 수준의 심각한 저출산으로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가, 2030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됨
  - 농촌 지역은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마을 상당수가 존립의 위기에 처함
- 저성장 시대 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
  - 고령화와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복지 지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저성장 시대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지방 재정 수입은 정체됨. 이로 인해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함
  - 지방재정의 자체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아지고 중앙 정부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현재 지방재정 구조로는 장래의 사회복지 지출과 지방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음



〈그림 6〉 지방 재정 자립도의 변화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2014

● 전지구적 기후환경 변화와 에너지 위기, 이에 따른 지역의 환경 파괴와 안전 위험

- 전 세계적으로 과도한 탄소 배출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해 전지구적 기후 환경 위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음. 극한적 날씨로 인한 가뭄, 홍수, 태풍 등 대규모 기상 재난의 위험성이 높아짐.
- 농촌 지역의 경우 기후에 민감한 농작물 피해를, 대규모 위험시설 입지 지역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대형 재난의 위험에 노출됨
- 다른 한편 자원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 가능성도 높아짐
-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대규모 탄소 배출 에너지 생산 시스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역의 생태적 수용 가능성을 감안한 지역 분산형 재생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함

● 여기에 덧붙여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북한 주민이 집중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 집중도가 더욱 높아질 것임

- 통일 이후에는 남북한 사이의 지역 격차 해소가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므로 남한 내부의 지역 격차는 통일 이전에 미리 시정하여야 함.

## 2)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 머지않은 미래에 닥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의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균형발전은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균형발전 담론에,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균형 담론이 필요함
- 균형발전의 당위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 정의, 자치분권, 복지국가 담론을 균형발전 정책에 접목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함

### ● 지속가능 담론

-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 일극집중형 국토 구조는 인구,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함.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균형발전의 중요한 담론으로 삼아야 함.
- 인구적 측면: 지역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인구 규모의 유지
- 경제적 측면: 성장동력의 지역별 다극화
- 사회적 측면: 계층간, 지역간 격차 해소를 양극화 완화 및 사회 통합
- 환경적 측면: 지역의 생태수용력 범위 안에서 개발, 환경 보전과 개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균형 도모

### ● 정의(正義 : Justice) 담론

- 같은 국민이지만 거주 지역에 의해 삶의 기회와 삶의 질의 차별이 있다면 이는 정의롭지 못한 것임.
- 편익 시설은 인구가 많은 발전 지역에, 혐오 시설은 인구가 적은 낙후 지역에 집중되는 시설 입지 결정 구조는 정의롭지 못함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물, 전력,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공급지의 생산 비용을 포함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구조도 정의롭지 못함
- 공간 정의, 환경 정의, 물 정의, 에너지 정의 등 정의 담론을 균형발전 각 영역과 정책에 적용할 수 있음
- 다른 지역의 편익을 위한 특정 지역의 손실에 적절한 보상(예: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한 보상 등)이 필요함

- 모든 지역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주면서 동시에 낙후 지역과 낙후 지역주민에게 최대 편익이 배분되어야 함

#### ● 자치 분권 답론

-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지역주민의 삶과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을 독점하고 있음 (예: 댐과 방조제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댐과 방조제 주변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음. 밀양 송전탑 주민 갈등에서 보듯이 발전소와 송전선로의 관리권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음)
- 행정 분권을 넘어 에너지 분권, 물 관리 분권 등 다양한 생활 영역의 분권이 필요
- 물, 바람, 전기 등 지역 부존자원과 지역 생산 에너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자치 주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 복지 국가 답론

-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복지 지출 증대에 따른 지방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적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복지 국가 답론이 필요함.
- 중앙집권 복지 국가보다 자치분권 복지 국가가 훨씬 민주적이고 효율적임. 자치분권 복지 국가는 전국적 복지 기준(National Minimum) 보장의 토대 위에,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음
- 전 국민이 동일한 기준을 필요로 하는 보편적 사안이나 현금 복지는 중앙정부가, 지역 특수적 복지나 현물 복지, 그리고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관리 운영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효과적인 자치분권 복지 국가 운영방식임

## 1)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대 정부는 대체로 균형발전에 있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는 정권마다 달랐지만,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과감한 수도권 분산 정책을 추진한 참여 정부가 가장 적극적 균형발전 정책 추진
- 하지만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은 공히 다음과 같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음
  - 중앙정부 주도하는 균형발전 정책.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 자율성과 특수성이 무시됨. 반면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은 중앙정부의 시혜적 정책에 의존성이 높아짐
  -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 간, 정부 부처 간, 민관의 협력이 부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지 못함
  - 각 부처의 칸막이 행정을 극복할 정책 협력,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 협력, 기업과 대학, 주민 등 민간 역량 참여를 유도하는 작동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에 실패
  - SOC 투자와 부동산 개발 중심의 균형발전 사업 추진
-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한 역대 정부는 이를 고치려는 의지를 표방한 바 있으나, 역대 정부가 표방해 온 비전과 방향이 정책 수행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고, 단지 구호에 그친 경우가 많음
  - 문제 진단과 문제 해결 방향은 제대로 제시했으나, 문제 해결을 실천할 구체적인 각론이나 세부사항이 제대로 뒤따르지 못했음

## 2) 계속 이어갈 균형발전 실천 과제

- 역대 정부가 주창했으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균형발전 실천 과제들을 뒤늦게 이제부터라도 적극 실천하여야 함
- 우선 무엇보다도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 분권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전환이 필요
  -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야 함. 이를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여야 함. 이를 위해 현재 중앙정부 국세와 지방정부 지방세 세입이 8:2인 구조를 적어도 7:3, 장기적으로 6:4구조로 개혁해나가야 함
  - 경찰 자치, 교육 자치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에서부터 실질적 지방자치가 확대되어야 함
  - 에너지, 수자원, 농어촌 개발 등 지역 주민과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 산하 개발 공사를 지역 공사로 분권화하여야 함
- 균형발전 정책을 부문별(sectoral)접근에서 장소 기반(place-based)접근으로 전환하고 이에 걸 맞는 통합적 거버넌스와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중앙정부 각 부처가 각각 시행하는 각 부문별 정책이 지역 내에서 연계 조정 통합되어 시너지 효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발전위원회와 광역, 기초 지방정부의 통합적 조정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기업과 대학, 주민 등 민간 영역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함
- 지역간 경쟁 대신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중앙집권 구조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원을 쟁취하기 위한 지역간 경쟁이 불가피함. 지방 분권을 통해 지역 자율성이 신장되어야 자율적 권한을 가진 지역간 협력이 원활해짐
  - 지역간 협력을 저해하는 발전 지역과 낙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 기금과 같은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
  - 수도권-비수도권 사이의 소모적 갈등을 피하고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대신 선(先)지방 육성, 후(後)수도권 규제완화의 원칙 속에서 구체적인 상생 발전의 목표지표와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가 필요

● 세종시, 혁신도시의 성공적 완수

-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물리적 신도시 차원을 넘어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거점 및 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도시 건설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지역 산업과 인재 양성, 과학기술, 연구개발, 고용 증진과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함

### 3) 새롭게 제기할 균형발전 과제

●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게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균형발전 과제들을 제시함

● 저성장 시대, 부동산 개발 중심의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 방식 전환

-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사업 방식 대신, 지역 고용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방식을 적극 고안
- 대규모 신규개발 방식에서 소규모 지역재생 방식으로 전환, 선 구역 지정 후 기업 유치 방식에서 선 기업 유치 후 입지 지원 방식으로 전환 등 개발 방식 전환
-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제로 지역의 토지 개발을 용이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개발 관련 특별법의 정비

● 정의(正義)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 간 편익과 비용의 균형 필요

- 모든 지역이나 사람에게 똑 같이 기계적 형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된 지역과 사람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갖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원칙임
- 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중앙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는 지역별 차등지원 제도를 적극 도입. 이때 중앙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성이 높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지표(예,

인구 증가율)에 의해 각 지역의 발전 정도를 구분하도록 함.

- 낙후지역에 혐오시설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혐오시설 총량제’를 도입하고, 편익시설이 모여 있는 발전 지역에도 혐오시설 배치 유도
- 환경 보호를 위해 지역 개발이 규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 서비스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이 지역의 보전된 생태계가 제공해 주는 각종 효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함

#### ● 민간 기업 본사 지방 이전 유도

- 참여정부 때 추진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뒤이어, 이제 수도권 소재 민간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정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함
- 민간 기업의 본사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제 지원, 보조금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교육과 문화, 여가를 포함한 지방의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국가적 관심이 필요함

#### ● 지역인재 육성과 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채용 장려

- 보육에서 시작해 초중고교를 거쳐, 대학, 직업 훈련, 평생 교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역 단위 인재 양성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지역 고교-지역 대학-지역 기업으로 이어지는 교육과 취업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인재 선순환을 도모
- 지역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에서 지역 인재의 일정 비율 채용 의무화 및 이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

#### ● 지역 환경과 지역 자원에 대한 지역통제권 강화

- 지역 환경과 지역 자원(강, 바람, 갯벌 등)의 관리 통제 권한을 중앙정부나 중앙정부 산하 공사에서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 혹은 지방정부간 협의 기구로 이관.
- 이를 통해 외부 요인에 의한 지역 환경 파괴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관리, 그리고 지역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균형발전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
- 균형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의 기획과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지지 및 추진 주체가 요구됨
  -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이를 실천하는 지역 주체들의 연대가 중요
- 무엇보다도 균형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 운영을 위해,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분권화가 요구됨.
  - 즉, 중앙정부에 의한 시혜적 차원의 균형정책이 아닌,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되어야 하며,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통합 추진이 필요
- 시대적 변화 추이에 대응하여 지역의 위기를 방지하고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가 제시되어야 함
  - 수도권 집중에 대한 기존의 문제의식이 주로 인구와 제조업 입지, SOC, 지역내 총생산 측면의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수도권 집중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과 기회, 소득과 일자리, 복지와 안전, 편익과 비용의 불균형, 나아가 생태 수용력을 고려한 환경 보전과 개발의 불균형,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불균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 지속가능성, 정의, 자치분권, 복지 국가 담론을 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접목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는 이미 2014년 3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을 중앙정부에 제안한 바 있음.



- 충청남도는 이미 (1)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2)생태계 서비스(PES) 지불제도 도입 (3)예비타당성평가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 (4)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입 (5)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 보상 (6)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등 6개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안하였음



강 현 수 원장

충남발전연구원

041-840-1114, hskang@cdi.re.kr

# 본 글은 2013년부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신균형발전 연구 보고서들과 본인의 “국가균형발전 1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2015. 3. 5)” 발표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요약 보완한 것임

## ◆ 참고 자료 ◆

- 강현수 2015. “현 시기 균형발전 정책의 과제: 이어갈 과제와 새로운 과제”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 강현수 외 2013.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성찰과 대안 모색』 사회평론
- 김용웅 2013. “새 정부의 지역정책 개선과제와 전략”, 국토연구원 발간 『국토』 2013년 2월호
- 박경 2011. “우리나라 지역 간 소득의 역외 유출 현상: 충남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통권 38호
- 박지현 2015. 『장래인구변화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 변창흠 외 2013. 『저성장시대의 신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사업의 방향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 성경룡 2013. 『균형사회와 분권국가의 전망』 한울
- 신동호 외 2012.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이관률 외 2013. 『신균형발전과 충남발전전략』 충남발전연구원.
- 이상현 외 2013. 『신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정준호 2013. “지역간 경제적 격차의 실상과 원인”, 강현수 외 2013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성찰과 대안 모색』 사회평론
- 조명래 외 2013.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충남발전연구원
- 주만수 2014.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 지방재정 분야”, 제1차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자료집
- 지역발전위원회 2012, 2014. 『지역발전 주요 통계자료집』
- 지역균형발전협의회 2014.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관련 정부 과제 대응방안 연구』 2014. 2
- 충청남도 2014.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 제안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 2014. 3.
- 충남발전연구원,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015.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기념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2015. 2
- OECD 2011. *Regional Outlook 2011: Building Resilient Regions for Stronger Economies*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보서비스 코참비즈(<http://www.korcham.net>)
-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region.go.kr](http://www.region.go.kr))

## 충남리포트(2014년~현재)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밭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호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2014-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김찬규 외	2014.08.21
2014-33	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정창수	2014.09.11
2014-34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2014.09.16
2014-35	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박 경	2014.09.18
2014-36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김홍기	2014.09.23
2014-37	충청남도 행복키움지원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	김용현	2014.09.25
2014-38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안	변창흠	2014.09.30
2014-39	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과 전략	안성호·곽현근	2014.10.02
2014-40	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현 외	2014.10.08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41	충남의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이충훈	2014.10.16
2014-42	충청남도과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박경철	2014.10.17
2014-43	농촌의 에너지자립, 산림바이오매스에서 찾다: 일본 산림구원대 활동	박춘섭	2014.10.30
2014-44	일본 내발적 발전의 도시형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4.11.06
2014-45	충남 지역 현실이 반영된 교통수요분석 DB 구축과 관리 필요	김형철 · 김원철	2014.11.12
2014-46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이해와 도입방안	김원철 · 유준일	2014.11.20
2014-47	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양중	2014.11.26
2014-48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강마야	2014.11.26
2014-49	한·중 FTA에 따른 충남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김종화	2014.11.26
2014-50	한·중 FTA, 충남 지역발전 전략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박경철	2014.11.26
2014-51	서해안 시대, 충청남도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방안	채진원 외	2014.12.03
2014-52	충청남도과 중국 하이룽장성 교류협력전략	박인성	2014.12.04
2014-53	인권 선진으로 나가는 충남의 정책과제	성태규	2014.12.10
2014-54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건강피해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명형남	2014.12.17
2014-55	충남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유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종윤 · 임재영	2014.12.25
2015-01	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5.01.05
2015-02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신동호	2015.01.13
2015-03	충청남도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전략	박철희	2015.01.26
2015-04	충청남도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특성	최은영 외	2015.02.03
2015-05	충청남도 도서(島嶼) 특성과 발전방향	한상욱	2015.02.12
2015-06	충청남도 행정통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최은영 외	2015.02.17
2015-07	2015년 충남 GRDP 전망 - GRDP 100조 시대 충남의 새로운 도약	김양중	2015.02.25
2015-08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정준호	2015.03.05
2015-09	신균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	박배균 · 김동완	2015.03.12
2015-10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조명래	2015.03.20
2015-11	삼교호 수계! 충남형 유역관리방안의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	김영일 외	2015.03.26
2015-12	하구의 생태적 가치!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상진	2015.04.01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http://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